

“신품종쌀 ‘강대찬’ 품질 엉망” 농민들 ‘대찬 반발’

전남도농기원 2021년 야심차게 개발해 20개 시·군 공공비축미로 선정 “밥맛 떨어지고 누렇게 변해” 소비자들 반품 속출... 전남쌀 이미지 추락 도농기원 “농가 질소비료 과다 사용” 해명에 농민들 “책임 전가하나” 분통

지역 명품 쌀로 인기를 끌어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도 선정된 신품종 쌀 ‘강대찬’이 품질 저하 논란에 휩싸여 농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수확량이 많고 키우기 쉬운 품종이라며 야심차게 개발해 지역 농가 곳곳에 보급했으나, 정작 소비자들에게 “밥맛이 떨어지고 금세 누렇게 변한다”며 반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가 지역 농가 목소리를 듣거나 품질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강대찬 품종 재배를 밀어붙여 지역 쌀 이미지까지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찬은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 지난 2021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쌀 품종이다. 강대찬은 ‘새청무’에 이어 전남 쌀의 브랜드화를 위해 개발된 품종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전남도는 강대찬을 2023-2024년산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선정하면서 인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전남도가 지난해 4월 전남 최초로 강진군의 2023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강대찬을 선정한 것이 시작이다. 강진군은 한발 나아가 지난해 11월 강대찬을 지역 브랜드 쌀로 출시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강진·순천·고흥·장흥·장성·진도 등 6개 시·군의 2023년산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강대찬을 택했다. 나아가 지난 1월에는 전남 20개 시·군의 2024년산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을 강대찬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의견은 갈렸다.

지역 농협 등에 따르면 강대찬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절반은 “밥맛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밥을 지은 뒤 시간이 지나면 금세 누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농협은 지난해 수확기 때 강대찬 750여t을 수매하고 178t을 도매했으나, 몇 번 밥을 지어 먹고는 반품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반품된 강대찬 쌀만 1t짜리 포대 5개, 20kg짜리 450포로 총 9t에 달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농업기술원 측은 “농민들이 강대찬 쌀에 질소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서 밥 맛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강진농협은 지난 3월께 강대찬 재배 면적을 줄여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진 곳곳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강진군 내 강대찬 재배 농가 80여%가 강대찬보다 단가가 15% 가까이 비싼 ‘새청무’로 품종을 바꿨다고 강진농협은 전했다.

강진군 또한 오는 9월 지역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전남도에 내년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농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 농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 과잉 공급되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에서 신동진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대체 품종으로 생산량이 오히려 더 높은 강대찬을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란 얘기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신동진의 10ha당 벼 수확량은 596kg이며, 강대찬 또한 545kg 수준이다. 다만 강대찬의 도정률은 70%로 신동진(66%)에 비해 높아 쌀 생산량으로 따지면 더 높다.

또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 시, 최소 한 달 이상 농업인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강대찬 재배지가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남지역 전체 쌀 이미지가 지 추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진군 성전면에서 8ha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강광석(54)씨는 “정부 공공비축미로 지정될 만큼 좋은 쌀이라면 1년만에 뒤집다니 어처구니없다”며 혀를 찼다. 강씨는 지난 3월 6만 5000원을 주고 종자 40kg을 사왔는데, 막상 파종하려 하니 돌연 지역 농협으로부터 재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던 쌀이 1년만에 품질이 푹 떨어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안 그래도 전남 쌀이 저가 쌀로 낙인찍혀 있는데 강대찬 때문에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구제역 차단 긴급 방역 방역 당국이 22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에 있는 소 농가에서 구제역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무위키 이용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원 벌금 300만원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한 ‘나무위키’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운동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운영해 나주시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에서 ‘윤 예비후보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일어났다’는 부분을 표시해 SNS에 올렸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누군가 지난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나무위키 글을 잠시 수정해 놓은 것으로, 이후 삭제된 상태였다.

당시 윤 예비후보와 경쟁 중인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윤 예비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캡처 사진을 선거구민이 포함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조작이 가법치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 말하지 않아도 위급상황 대처 광주경찰청, 661건 접수 처리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으로 총 661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치 확인과 현장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입된 시스템이다.

경찰이 신고자에게 문자(URL주소)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이를 클릭하면 신고 위치, 휴대폰으로 찍히는 현장 영상이 실시간 상황실에 전송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숫자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면 경찰관이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보내 신고위치와 현장상황을 확인하는 ‘똑똑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광주 남구에서 보이는 112를 활용해 강제추행범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 후 안내에 따라 문자전송된 URL을 누르면 보이는 112접속을 통해 실시간 영상 전달, 위치확인, 비밀채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하기 어려운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5·18 일부 공법단체 깊어가는 갈등

교육관 위탁 운영 공모 놓고 충돌 “막가파식 행정 피해 수집 공개”에 강 시장 “고발권 남용 무고죄” 경고

광주시와 5·18 공법단체 일부가 5·18교육관 위탁운영 사업 공모와 관련해 고소전에 휘말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막가파식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해 오는 30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최근 5·18교육관 사업 공모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고, 그 탓에 두 공법단체가 공모에서 탈락했다며 강 시장과 5·18기념체

단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5·18단체뿐 아니라 어린이집 대체인교사들, 광주시 직원 등 강 시장의 막가파식 행정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사례를 수집해 공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또 지난 17일 강 시장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부상자회 등이 게시한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

고 집어던졌으며 23일 강 시장 등 3명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두 공법단체의 행동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시장은 22일 5·18교육관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 대해 “행정은 절차대로 잘 진행했는데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저와 행정을 고발하는 것은 고발권 남용이라 생각한다”며 “엄밀히 보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5·18 추모 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에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신고 포상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